

#### 4.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가속화 방침

- (구조조정 가속화) IMF의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요구, 금감위의 구조조정 추진 일정 및 방법 확정,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조기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 등으로 6월부터는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문제점) 구조조정 자원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융권이 '자기 살기'에 급급하여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대량 도산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임

#### □ 구조조정 가속화

- 정부·IMF는 2/4분기 정책의향서에서 기업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이기로 합의
  - 부실기업 구제를 위해 공적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며,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의 중심 역할을 맡도록 함(대기업에 대해서 9월말까지 상세한 재무상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98년 6월말까지 채무조정반 및 채권단 협의회 설치)
  -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고(입법안 제출 98년 6월 말), 뮤추얼 펀드 설립(법률안 제출 98년 8월 말) 및 자산담보부 채권 발행(법률안 제출 98년 8월 말)을 위한 관련 법안을 6월내 처리
- 금감위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1차 구조조정을 9월말까지 종결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일정을 발표
  - 은행별로 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구성, 부실기업 판정 작업을 벌여서 이를 기초로 5월말부터 부실기업을 정리
  - 대상: 대기업은 은행별 여신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은 은행별 여신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함
  - 판정 기준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가능 등으로 구분하여 회생불가능 기업을 조기에 퇴출
  - 대기업은 5월말, 중소기업은 6월말까지 판정을 완료, 각각 6월, 7월부터 조치
  - (추진 일정) ▲ 5월- 은행별로 기업부실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거래기업을 우량기업/회생가능기업/부실기업으로 분류, 부실기업은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과감히 정리(6월 이후) ▲ 7월- 부실 은행 정리 ▲ 8월- BIS 기준 미달 은행 경영진 단후 정리 ▲ 9월- 제2금융권 정리

- 「국민과의 대화」에서 표명된 대통령의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
  - (정책 순위) 대통령은 정책의 1순위를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둘 것임을 밝힘으로써 정책 우선 순위의 혼선을 정리하였음
  - (대기업 구조조정) 5대 대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재임 중 지속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였음
- 정부의 구조조정 조기 추진 방침 확정의 배경
  -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쟁력 회복 ▲수출 증대와 외자 유치 ▲고용 창출 ▲노동계에 대한 고통 분담 요구 등이 불가능하고, 제2의 외환 위기, 나아가 산업 기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
  - 구조조정의 필수 조건인 외국인 투자가 최근 구조개혁의 지연, 노사분규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국내 증권 및 채권시장에서 이탈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 평가 및 문제점

- (구조조정의 본격화) 정부 내에서 구조조정 일정과 추진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제도들의 근거법도 상반기 중에 마련될 예정이므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재원 조달 방안의 미흡)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임
  - KDI는 금융구조조정에만 향후 5년간 67조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위축된 부동산 시장, 시가 총액이 94조 원에 불과한 주식시장, 발행 잔액이 7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국·공채시장, 재정 투입의 어려움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는 불가능함
  - 외국인 투자자들은 '先구조조정 後자본참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초기에 외자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의 부작용 우려) 부실기업 판정 이전에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막론하고 대출 중단과 자금 회수에 따른 자금난 심화로 대규모 기업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시장의 붕괴도 우려됨
  - 또한 정상이나 회생가능 기업으로 분류된다 해도 '자기 살기'에 급급한 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있을 지는 의문임

(박 홍 진 [hjpark@hri.co.kr](mailto:hjpark@hri.co.kr) 2724-4032)